

“국민연금 전주리스크는 없다”

김광수 국회의원 강력 대응

이전 첫 해 수익률 7.28%
최근 7년간 최고 실적 올려
‘기관 흔들기도 넘어’ 우려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역행하는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하고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는 불거져적 상황으로 실현가능성 없는 서 울타령을 멈추고 안착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기금운용역들의 이탈과 수익률 저하를 지적하며 ‘노동쟁분부·전주 이전 리스크·국민연금 패싱’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전주 이전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주목과 지탄을 받게 된 계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을 위해 삼성 사금고(私金庫)로 전락한 사건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 “해의 투자자 입장에서 635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거래가 성사될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작 한두 시간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주 방편을 건너뛴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반문하며 “지난해 기금운용직 이직률이 11.6%로 금융업계 평균 이직률 12.3%에 비해 낮은 만큼 전주 이전 후 공단의 이직률이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직원들의 인력유출과 기금운용 수익률 저하 등을 거론하며 전주 이전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김광수 의원은 “일부에서 국민연금 전주리스크”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의

“재판거래 논란, 법원행정처 해체 가능”

이동원 대법관 후보 입장 밝혀



이동원(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법 불신 해소 방안과 관련, 법원행정처 해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행정처 해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사법행정권이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

구를 분리하고, 법관들로 돼 있던 여러 보직들에 대해 일반 민간, 또 법원 직원들에게 개방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국민 앞에, 전체 법관 앞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법원장의 인사 등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완전히 없애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나 헌법정신(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이 고용노동부 차관,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해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서 이상돈 의원 주장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서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매년 6월 말까지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브라질 등의 국가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 국회

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장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미국,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다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1명이 개정법안을 냈다. 환노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도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장은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임위가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공감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고용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은 정부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성향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위원을 선정하면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을 많이 추천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노동계 편향이 아니라 여성을 같이 넣어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 상량식 참석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25일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 상량식에 참석해 폭염의 악조건 속에서도 땀 흘리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상량식은 목조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 마룻대, 즉 상량을 올리고 거기에 공사관련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으로 전라감사가 집무를 보던 전라감영의 중심인 ‘선화당’의 복원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이다.

정호운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선조들이 일구었던 전북의 찬란한 역사를 현재 시점으로 소환해 내고, 도민들이 더 큰 꿈을 꾸는 나

날을 창조하는 전라감영의 복원은 이제 시작이다.”며 “그간 숏한 논의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도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과정과 성과를 간절히 기대하며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 84억원을 들여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하던 전라감영 일원을 복원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까지 선화당 및 관공각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목공사가 시행중이며 2019년 12월까지 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감영을 체험할 수 있는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도 함께 제작·개발해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기자

정의당 “드루킹 특검의 무도한 행태” 반발

정의당은 25일 ‘드루킹’ 특검이 심상정 의원 등 당 핵심 관계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검의 이런 무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주장은 어떤 의도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드루킹 일당이 정의당을 상대로 협박성

행위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과 김종대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지금 특검의 행태는 허위정보를 확대, 재생산해서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트위터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허위 정보를 근거로 공당의 정치인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지금이라도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